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포럼

○ 포럼 기획 개요 및 목적

-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의 연간 포럼 개최(격월간)
- 목적 : 건국 60주년과 정권 교체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로드맵을 제시

○ 시기 : 2월 27일 (水) 오후 2 : 00 ~ 4 : 00

○ 주제 : 햇볕정책 10년 평가와 신정부 정책 방향

◆ 햇볕정책 10년의 평가

- (1) 햇볕정책의 성과 (긍정적 측면)
- (2) 햇볕정책의 파생 문제점(부정적 측면과 미흡한 면)

◆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 (3) 기본 방향의 평가 (비핵 · 개방 · 3000 구상)
- (4) 대북 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 (5) 향후 보완 과제

○ 포럼 참석자 (가나다 순)

- 사회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발제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토론 :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장광익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 2008년 연간 포럼 기획안

- 제1회 : 햇볕정책 10년의 평가(2월)
- 제2회 :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관련한 국제상황 변화 점검(4월)
- 제3회 :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공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 전략(6월)
- 제4회 : 북한경제 1인당 소득 3000달러 만들기 전략-개혁·개방 전략(8월)
- 제5회 : 북한경제 1인당 소득 3000달러 만들기 전략-산업 육성 전략(10월)
- 제6회 : 결산 종합 포럼(12월)

< 발제문 >

햇볕정책 10년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1. 햇볕정책의 내용

- 1) 북한을 포용하면서 對南 적대정책을 완화시킴
- 2) 한·미 관계 강조하면서 對北 접촉의 기선을 잡음
- 3)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

2.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의 3대 기조

- 1) 햇볕정책의 계승
- 2) 자주적 대북외교(대미의존 탈퇴)
- 3) 교류 및 접촉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 전개 상황

- 1)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 6.15 남북공동선언
 -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공통
 - 이산가족, 친척방문 등 인도적 문제 조속해결
 -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사회·문화·보건·체육·환경에서 교류와 협력 활성화→신뢰구축
 - 남북 사이에 대화 개최
- 2) 2003.8. 제 1차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개최(북경)
- 3) 2005.2.10 북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
- 4) 2005.5.15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발표
- 5) 2005년 9.19 공동성명(6자회담)
 -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
 - UN 헌장 및 국제규범 준수
 -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 협력증진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노력
 -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취함

6) 2006.10 북 핵실험 강행(함북 길주군 풍계리)

7) 2007년 2.13 합의

- 초기단계 이행계획 : 60일 이내
- 5개 실무그룹 구성 : 30일 이내에 첫회의
- 다음단계 이행계획 : 초기단계 완료이후
-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 초기단계 완료이후
- 한반도 평화체제 :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포럼에서 협상

8) 2007년 10.4 정상회의 선언

- 6·15 정신에 바탕둔 통일(민족끼리 자주통일)
- 내부불간섭, 각자 법률, 제도적 정비
-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으로 발전
- 종전 체제 종식 → 평화체제 구축 공감 → 3자 또는 4자 정상회의 추진 및 6자 회담위해 공동 노력
- 경험확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 백두산 - 서울 직항로 개설, 2008 북경 올림픽 응원단 공동 열차
- 이산가족 방문확대, 쌍방대표 상주
-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정상들이 수시 만남

4. 경험 확대 추이

1) 대북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대북 지원	2,314	8,557	14,246
협력 기준	8,636	22,054	37,622

<자료 : 통일부>

2) 남북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교역액	12.3	20.0	38.3
농업의 교역액	11.4	13.5	24.0

<자료 : 통일부>

3) 교역참여 업체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536	506	432	481	462	523	471
위탁가공	157	147	108	109	118	136	123

<자료 : 통일부>

5. 평가

<긍정적 측면>

- 1) 남북간의 교류·협력수준 향상(경제·비경제 포함)
- 2) 남한의 경제력, 민족애, 평화지향자세 北에 주지
- 3) 남한 정부의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적 위상 제고
- 4) 남한 국민들에게 평화 통일의 기대감 제고

<부정적 측면>

- 1) 현실에 못미친 이상(북핵의 심각성 오판)
 - o 남한에의 직접적 위협 과소평가
 - o 북의 「핵=김정일 체제 유지」
- 2) 남한 국민의 안보 불감증 초래
- 3)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간극 발생
- 4) 지나친 양보로 對北 협상력 크게 손상
- 5)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부담으로 작용

6. MB외교의 7대 원칙

- 1)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 정책'
- 2)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
- 3)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발전
- 4) 세계와의 동반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
- 5) 국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 6) 경제 선진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
- 7)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외교'

7. 비핵 · 개방 3000 구상

- 1) 핵포기 --> 개혁개방 --> 국제공조환경 --> 10년 내 3천 달러, 수출 기업 100개
- 2) 미·일 우호기조 복원, 중·러 협력 확대
- 3)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나들섬)
- 4) 30만 산업인력 양성 (북한판 KDI, KAIST설립 지원)
- 5) 세계 은행, ADB, 일본측 배상금
- 6) 철도, 항만, 통신, 도로정비
- 7)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구체적 농·공·상 정책

8. 결론

-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 불가피
- 북핵 문제 해결에 연결되는 대북교류 협력정책
- 6자회담과 한·미·일·중·러의 다자체제 재정립

<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포럼 > - 전문 게재

□ 제1회 : 햇볕정책 10년 평가와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발표

- 남북한 통일 문제를 논할 때 남쪽의 정책적 의도와 목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음. 정책, 수행 방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의 대북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의도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속단하기 힘들다.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사인을 추정할 뿐이다. 지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한다.

◆ 햇볕정책 내용

1. 북한을 포용하면서 대남 적대정책을 완화시킨다.
2.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북 접촉의 기선을 잡는다.
3.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구축한다.

◆ 노무현 정부의 3대기조

- 햇볕정책 계승. 정권 초기에는 자주적 대북외교를 강조. 교류 및 접촉 확대를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했다.

◆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면 가장 기폭제는 6.15 정상회담. (내용은 자료 참조)

- 민족 자주적인 남북관계 정립. 통일문제에 다가감. 경제 협력이 중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

핵문제는 양자 정상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시할 수 있음.

핵문제는 국제문제로 등장하고 부각이 되는데, 제1차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이 개최. 여기서 북의 핵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CVID를 강조. 완벽하고 증명할 수 있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부시의 2기가 출범하고 2002년에는 부시의 반핵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선언을 하고, 영변에 있는 폐연료봉 8,000개 인출을 발표했다.

6자회담 공동성명 개최

-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넓혀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다자적인 내용.

2006년 10월 - 핵실험 재강행. 9.19 공동성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 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

2007년 2월 - 초기 단계 이행 계획 채택. - 6자 장관급 회담도 개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2007년 10.4 정상회담. 똑같은 개념을 견지. 민족 자주적인 통일을 얘기.

경협을 중시한다는 내용 강조. 핵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음.

현재까지 남북 대화의 틀을 보면 핵문제는 6자회담. 그 외의 통일문제는 남북간의 양자 관계에서 전개시켜 나아간다는 개념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북이 강조하고 남이 동조하는 것은 경협확대다.

남북 교역을 보면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음. 교역 현황도 참여정부에서 높은 수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교협 업체 수를 보면 재밌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업체의 수는 줄어들었다. 위탁가 공업체도 개성공단이 진정되어 있음에도 숫자로는 떨어져있다.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신뢰 구축은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

1. 남북간의 교류, 협력 수준 향상
2. 남한의 경제력, 민족애, 평화지향자세 북에 주지
3. 남한 정부의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적 위상 제고
4. 남한 국민들에게 평화 통일의 기대감 제고

<부정적 측면>

1. 현실에 못 미친 이상 - 북핵의 심각성 오판
2. 남한 국민의 안보 불감증 초래
3.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간극 발생
4. 지나친 양보로 대북 협상력 크게 손상
5.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부담으로 작용

- 부정적 측면 설명

- 김정일 체제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핵은 최후의 보루라는 남한 측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 언젠가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폈다는 것이 단점.

- 남한에게 핵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평가. 이건 과소평가한 것이다.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한의 교류가 지속되니까 남한정부의 안보 불감증도 제기되었음. 안이한 생각. 막연한 생각이 남한 민간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음. 한미관계가 불필요한 갈등 발생. 대북협상에서 양보를 한 것이 대북협상 능력에 있어서 손상이 온 걸로 비춰진 거 아니냐는 의문 제기도 함.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부담으로 작용.

국제적 노력에 비했을 때 남측의 자세, 햇볕정책이 북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 무시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의 7대 원칙 (자료 참고)

- 좌파 이념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확실한 이념을 지키고 국익을 지켜나가자.

비핵 개방 3000구상

- 핵포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 대북 합작 공동 경제 실현이 들어가 있음.

30만 산업인력 양성 KDI 카이스트 개발 개발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설립 지원 우리가 endorse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계은행, 일본 측 배상금 받는데 동조할 수 있음.

- 농업정책은 참여정부에서도 해왔음. 그러나 공업, 상업도 같이 남한과 공동으로 하나감으로써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책 수립 집행하는 데 남쪽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결론은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 불가피

북핵문제와 연결되는 대북교류 협력. 북핵에서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어야 대북 교류를 하자.

- 5개국간의 구체적인 기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음. 단지 6자회담만. 이제는 5자가 북한의 핵포기 및 경제개발까지 합해서 국제기구, 다자체제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새정부의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

< 토론 >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햇볕정책의 공과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조 원장님께서서는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지금 이 회의에서 참석해서 토론 발제를 하라고 했는데 발제는 못하겠다고 했고, 오늘 맡아서 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주제를 받고 토론해야 될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하여간, 적절하게 말하겠다.

특히 공과를 따지기 전에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을 시작한 1998년 추진되었던 2000년 이후에 우리 국력이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게다가, 사회 내부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로서의 활력이 넘치는 시절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전개되었던 시기였고,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화해 협력으로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된 시기였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당시 북한은 어려운 상황 지속되고 있었다. 1990년대 10년 전반으로 북한 경제 후퇴하고, 북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북한에 대한 다른 정책적 대안 없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리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전략적으로 상대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의 질

곡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풀어가고자 했던 시기였다. 유 교수도 말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전략적으로 상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스스로 전략을 가지고 외교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명암은 물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전략을 가져서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의 전략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을 우리 전략 파트너로 생각해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초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상대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유 교수도 말했지만, 이 정책을 인해서 교류 협력이 증대했다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증대가 평화체제로의 형성되어야 된다는 새로운 목적을 만들었다. 또한, 이 교류의 증대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 위협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통일을 희망 염원 이념의 세계에 있던 것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렸다고 생각한다. 새정부가 실용주의적 정책의 기틀이 이런 햇볕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은 유 교수님이 발제에서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교류 협력이 전개되었지만, 거기에 걸맞게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쌍방향 교류가 아니라, 북한의 의지에 따른 선택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도 북한의 의지에 따라 끊어졌다 이어지는 것을 반복. 이런 문제점은 새정부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남북관계만을 너무 중시하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서 한미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을 초래했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텃다면 이제 트인 물꼬를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내가 햇볕정책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분들과 뉘앙스가 다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햇볕정책이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돌파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까지 동맹을 주장하고 대북관계 개선을 취임사에 넣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 이건 국민의 열망이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다면 이들 정부에서는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구체화 시킨 것이 햇볕정책일 뿐이다. 그 동안의 국민의 열망을 구체화시킨 것이 햇볕정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 정부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낸 건 아니라는 얘기다. 외국학자는 왜 통일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냐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정치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일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다. 사실, 우리민족이 하나라는 심리적인 일체감은 아직 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은 강하지만 지역문제도 해결 안되는 등 남남갈등도 있어서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열망의 돌파구가 햇볕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돌발 사태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잠재해왔고 표현되어왔던 대북정책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이 시도되었을 때, 남남 갈등이 있었음에도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이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전부터 칼럼을 통해서 지적했었는데, 정부는 합의와 동의를 혼동해서 사용했다. 합의(consensus)는 국민이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동의(consent)는 정책의 실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단지 햇볕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혼동해서 생각한 것이다. 한스 모겐스라는 정치학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격할 때 쓴 유명한 얘기가 이런 햇볕정책에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한스는 루스벨트에게 "국민적인 합의를 믿고 정책을 추진했다. 모든 사람을 동의의 과정을 통해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합의를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고 잘못 가정하는 바람에 남남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햇볕정책 이후에 통일 정책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한 열망은 강했는데 이런 열망을 정치권에서 받아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성사 될 수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성사 될 수 있었지만 안 되었다. 햇볕정책은 너무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익에 접합을 통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적인 생각으로만 일을 진행해서 잘되지 않았다.

너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야 한다. 북한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 정책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수,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인 괴

리가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과는 냉전구조 해체의 물꼬를 트고 거역할 수 없는 틀로 자리매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남북한의 적대적인 상호인식에서 포용적 상호인식으로 넘어간 것이 의의가 있다. 북한이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에서 북한 퍼주기 논란도 있지만,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에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을 수월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관리가 부단의 안정적인 관리, 평화의 유지, 피스 빌딩(peace building)은 안되어도 피스 키핑(peace keeping)은 해왔다고 생각한다. 경제 사회의 선진화를 이룬 것이 이런 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책에서 우려중 하나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심리적인 무장해제가 된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안보이다. 그런 안보라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1순위로 두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의 대북 위협에 대한 심리적인 무장해제가 나타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정부의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교 안보가 19, 20위로 까지 밀려나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수출입 의존적인 나라 개방적 나라에서 글로벌 소사이어티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존의 한국의 발전의 토대를 형성했던 한미일 연대관계의 지그재그 현상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보수진영의 반발을 가져왔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과를 덧붙이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 지속되면서 남북의 인식의 간격은 상당히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상호간에 제국주의 및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접촉하고 개성공단에서 1만 7천 명까지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하고 금강산에서도 천 명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 개방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으면 망하기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거래가 많아지면서 남한의 북한에 가진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남 의존도가 커졌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실용주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념보다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실용주의가 이루어

어지는 데 이런 것도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이념 전쟁하다가 실용주의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그 와중에서도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들은 햇볕정책을 하면서 크게 개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의를 갑자기 취소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관계까지 진입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평가 앞날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아까 앞서 햇볕정책을 얘기했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정의하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짐작하면 그 중에서 세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실용주의. 이는 우선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뉘앙스다. 지난 십년간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맞추지는 않겠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에 도움이 되는 개선되는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생각.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상호주의. 그냥 상호주라기보다는 앞의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신축적 상호주의, 비대칭적, 생산적 상호주의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현실적이라는 생각. 정부에서는 생산적인 상호주의라는 말만 했다. 신축적 상호주의는 동시가 아니라도 좋고, 비대칭적은 동가가 아니라도 좋다. 생산적 상호주의는 단순히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생산할 수 있는 상호주의의 의미다. 우리가 100을 지원해서 북한으로부터 200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 자본은 우리가 대도, 노동토지는 북한이 제공해서 그 결과로 남북에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라고 짐작한다.

국제 공조, 한미 공조 등이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원칙은 새로운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수단을 구사해나가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가면 지난 10년의 실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 실리추구, 실용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에 상호주의도 있으면서 포용주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포용적 상호주의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보수진영보다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취향도 그렇고 남북, 북미관계가 양호하다는 점 때문에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을 천명했지만, 핵불능화가 시작되면 경제, 교육 인프라를 깔겠다고 말했다. 불능화가 조금이라도 진행된다면 6자회담 진전이 있으면 경제 교육 인프라 제공의사를 표현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네오콘적인 사고보다는 상당히 실용주의적 대북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인 관점에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주의적으로 가겠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기초에서 보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국민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교조적인 측면이 있었다. 중국에서 실용주의, 덩소평의 실용주의, 모택동의 교조주의에서 탈피한 것.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도 그동안의 정책을 반면교사를 해서 교조적인 이념적인 정책에서 부터 실용적인 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기대도 되고, 너무 한쪽으로 보수로 적대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비핵 개방 3000의 내용이나, 정책 브레인의 면면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

남북관계의 비전이 조금 더 승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실용적인 외교로 풀라고 하시고, 외교수석도 경제를 발목잡지 않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 발상을 보면 지난 정권하고는 반대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잘못됐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북한의 위협, 협력 관계에 대한 좌표를 새로 논의해야 하는 데, 지난 번 정권에만 문제가 있으니 반면교사를 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를 외교의 관점, 국익의 관점에서 푸는 것은 위험하다. 남북관계는 실용으로만은 풀 수 없는 민족적인 문제이다. 실익을 중심으로 하면 문화 심리적인 일체감 형성이라는 대승적인 아이덴티티가 손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이 포용이라서 이

변에 실익게임을 가졌다는 것은 위협하니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국정우선순위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밀려났다. 우선순위가 19, 20위에 가있다.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남북관계는 중요한데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통일부도 80명 감축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실용주의를 하다 보니, 이익중심이다 보니,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통일 평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정치가 흡수해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를 중국, 북한이 MD체제를 반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상하이 중국 북한의 대결구도가 갈 수 있다. 자초해서 신냉전의 전초기지로 전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가능성은 낮지만, 이명박의 실용주의적 성향 때문에. 하지만, 주변 발언을 종합하면 이런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부의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이명박 당시의 후보의 공약집하고, 대북관점에 대해서 좀 탐독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국민들의 대북관이 1980~90년대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이회창 캠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북문제를 은근 슬쩍 갈려서 모션 아니냐고 비판을 할 정도였다. 너무 타협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80~90년대와는 다르다. 북한은 공존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은 동족이고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함에 따라 유도가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북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떠나감에 있어서 협상과정에서 너무 저자세였다는 것은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국방의식도 흐려진다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원장의 생각과는 달리, 지난정권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가겠다는 것만은 아니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학자적인 입장에서 짐작컨대,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다. 그것 때문에 차별화를 했고 당선이 되었는데, 마치 클린턴이 'Bring people first'를 걸고 경제 아젠다를 집어넣고, 국제문제를 뒤로 두었다. 대북 통일 문제를 뒤로 놓은

것은 선거 전략의 문제이지 우선순위를 뒤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비이락으로 통일부를 없앤 것도 겹쳤다. 이에 대해서는 새정부에서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후순위로 밀린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통일 평화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새로운 냉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대북 협상 자세가 저자세였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조체제로서 뭔가를 대항하고자 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는 전통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 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능력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고라고 생각한다. 장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인 반대는 아니고 어떤 경우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끌어들여야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만 상대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철저하고 유연한 원칙을 새정부는 내세운다. 철저하다는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는 위에 활동 반경, 발언권이 악화된다. 유연성을 강조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십년은 유연성이 있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모두 얻으려면 국제공조도 성공하고 남북 주도권도 성공해야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새정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 새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만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인가. 비핵 개방 3000에서부터 막혔다. 북한이 핵포기를 해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핵포기는 어떻게 정의하고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등을 핵문제를 연계로 보느냐 당장의 문제로 봐야 하는 지도 판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정책을 보면 실현 가능성은 일종의 아이디어인 타입이다. 이상적인 것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의 점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협과 관련해서도 좀 약간의 시각차가 있지만, 이것도 지난 십년간의 경협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경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함에 있어서 경제성에 기초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부터 경제 협력은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강화시키고 잘 이루어져야 체제가 가능한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고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또 의미

가 있다. 이런 협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 두리 몽실하게 묶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비핵 개방 3000은 비핵이 전제가 되면 그다음에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참여정부와는 접근 방식이 접근이 다르다. 걱정되는 것은 지난 정부가 한 것은 다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에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정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신뢰가 가지 않으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새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갖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10년의 정책을 누가 담보를 할 것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측면 접근은 좋은데 다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 좀 더 현실적으로 정책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핵 정의도 확실치 않다. 비핵을 진행으로 봐야 되는지 정체된 것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이걸 단지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생각이고 네오콘적인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봤을 때 이걸 바뀔 것이라고 생각. 안 바뀌면 대북정책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도 한반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관리가 대북 문제.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정책 수단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청와대 수석은 보면 3명 빼고 경제학 전공이다. 문화 감정은 잘 신경쓰지 않을 것 같은 걱정도 든다.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내정자도 그렇다. 평화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좀 더 제시를 해줘야 한다. 다만, 현재 경협 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한다. 경협은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대북경협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

성도 많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소강국면, 나쁘면 쇠퇴인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10년은 소귀에 경읽기 였는데. 이번 정부는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정부는 실용정부인만큼 국민의 소리가 뭔지, 여론 주도층의 제안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비핵이 선행되고 경협 개방을 간다. 조건부다 해석하는데, 저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고 비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경협은 계속 되고, 동시적으로 하자는 얘기. 이렇게 동시적으로 가자는 거고 오히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협을 활성화하고 남이 북을 유도하자는 방식은 효과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핵이 오히려 생겼기 때문에, 일단 비핵과 개방 경협 관계를 동시적으로 가면서 북한을 경제개발로 유도하자. 가시적으로 그들이 핵을 포기하면서 가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 단지, 비핵이 아니면 스톱하는 것이 아니다.

핵을 북이 가졌느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핵문제는 위의 희망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대북 협상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부적인 힘도 활용해야 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앞으로 정부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역량도 높아져있고, 북한도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더드, 보편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나름대로의 만족스럽진 않지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되는 것은 대북정책을 대북정책으로만 가지 말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선진화라는 큰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규정해야 소위 선진 한국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접근하면 남남갈등 해소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비핵 개방 3000을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계

획을 만들려는 의지, 그런 준비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권유를 하고 싶다. 지난 10년간 잘 평가를 한 토대위에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토대로 새정부 구상을 결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그래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을 빠르게 개방으로 끌고 갈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이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해왔던 것이다. 북한도 이제는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협력, 지속에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사회에 경제 협력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해서 대북정책을 피지는 말자.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비전을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 위협, 안보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난 정부의 반면교사 같은 인상만 주고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

오버도프 교수 왈 “이명박 정부가 한미공조 얘기하는 것은 다 바람직하고, 문제는 일본, 미국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학계, 미디어, 시민단체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본 모든 신문을 보면 후쿠다 총리가 연설할 때 한국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명박 정부도 밖에서 안의 한국을 보는 자세를 봐야 한다. 밖에서는 우리를 잘 생각 안한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서툴렀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보여 줘야 한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나가는 정부의 능력, 수완, 이런 것들이 국정 전반에 넘쳐나고 이것이 대북정책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여론을 흡수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스무스한 효과적인 정책 도모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효율적인 정부가 기본 성향이 아니다. 효율은 절차를 중시하는 것. 이명박 정부는 효과 결과를 중시한다. 너무 결과 지상주의 정책만 취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륜, 비전 실용주의로 극복하기를 바란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비핵 개방 3000에도 나와있지만, 어떻게 개방을 갈 것인가. 비핵이랑 어떻게 연결 할 거냐. 북한이 비핵으로 간다는 성의만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을 보여서 실용, 실증정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 유엔이 형편이 좋은 나라에서 기금을 걷어 지원하는 기금은 우리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말로만 유엔을 통한 세계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국제 기금을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100만 불도 필요한 나라. 발전의 청사진과 함께 돈이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이면 비핵 개방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인 것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북한을 상대로 정책을 구상할 때는 시선을 멀리두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통일 비전이 없는데, 시선을 짧게 두면 그것이 안 보인다. 시선을 멀리두면 비전이 생길 것이다. 15~20년 후에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그 시간이 먼 게 아니다. 남한정부,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남북한을 통일된 정부로 보는 구상도 있어야 한다. 외교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서는 부분도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구체화할 때 이런 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뉴욕 필하모니 공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500 명 정도가 연주회를 듣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좋을지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문제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자.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이 핵문제 북한과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문제만아니라, 북한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공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9.15 공동성명을 봐야 된다. 이때 북한은 핵을 포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미국 사이 개선을 얘기. 개선하는 데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런하고 이런 계기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좋은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이것이 공연에 기대하는 것.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북한 국민이 음악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국기가 양쪽에 있었는데. 미국 국기를 두고 연주회를 한 것은 충격이 아닐까.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중국 핑퐁 외교로 시작된 미중 화해 정상화하고 이걸 비교해서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다르다.

중국은 그 당시 중국의 실용외교 개혁 개방이 이미 선언된 이후고 가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다. 1971년에 핑퐁 외교. 중국 미국의 국교 정상화과정 북미 정상화 비교는 중국의 경우에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으로 가자라는 정책적인 기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북한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중요하다.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등장이 왜 필수적인지 정책적인 확신이 서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은 불가능. 미중간의 외교 접근으로 까지 가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북측 입장에서 보면 남쪽이 우리에게 잘한다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핵은 해제를 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문제도 해결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공연한다, 미국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영터리 같은 해석이지만, 북한으로 보서는 제국주의 경제 전선 추구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관리가 필요하다. 북핵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시기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냐. 미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

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네오콘의 큰 문제는 상대편 나라의 사회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 정책으로는 위험한 정책이다. 키신저가 중국과의 수교 딜레마는 대만 문제. 주은래와 단독회담시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을 때. 키신저가 묘안을 냈다. 대만 해협 양쪽에 사는 사람은 다 중국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 주은래도 묘안이라고 생각.

판문점 양쪽 사는 사람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비껴가는 공간을 만드는데 문화적인 이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비껴가고 만족을 할 수 없지만 서로 으르렁 거리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

중국의 경우는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보면, 조선 신보에서 금년은 역사적 전환의 해. 역사적 전환의 해는 처음 썼다고 얘기했다. 전환이라는 말은 썼지만. 이런 분위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 북핵문제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이걸 위기를 지연시키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4월 중순 이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는 데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면 서로 으르렁댈 것이다. 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신중하게 분석을 하면 3가지

- 중국은 개혁 개방 분위기였음

- 미국에서 중국의 의미. 시장적인 권력으로서의 의미, 사이즈도 있다. 미국에서 보는 중국은 결국에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당위성, 논리가 있었다. 북한은 뭐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핵이 문제다.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논거는 있으되, 북한은 끝까지 핵만 가지고 있겠다는 논거가 나온다. 결국 핵이 걸림돌. 북의 접근은 중미 접근보다 쉽지 않다.

- 트러스트 빌딩(trust building). 중국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개도국 사회에

서만이라도 약속하면 지키는 나라로 부각이 되고 있었다. 중국의 트러스트 빌딩 (trust building) 수준이 어느 정도 왔었다. 비록, 북한은 오케스트라가 왔어도 트러스트 빌딩(trust building)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것은 좋은 진전 상황은 있다손 치더라도, 북미의 외교 정상화 접촉의 가속화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 pre- mature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미국도 지금 협상을 통해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북한이 처음이다. 미국 북한이나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성공하면 효과가 크다. 서로 이걸 잘 깨지 않으려는 노력.

중국 외교부 정책실이 중국 북한 관계는 선린우호로 발표. 혈맹에서 이것으로 간 것은 북한으로서는 충격. 결국, 북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니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 이것도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 이것은 북한에서 하기 어려운 것. 이런 사고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고 생각. 얼마큼 진전되는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움직임.

라이스가 변환 외교를 썼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변환 외교의 한 부분으로 이번 행사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필하모니 공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공연의 합의는 시점이다. 11월 말, 12월 초에 이미 합의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이행이 되었다. 합의의 시점에서 북한은 무엇을 생각했을 지를 생각해야 됨. 그런데, 두 가지가 상정할 수 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북한 핵신고가 완료되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합의 시점에도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 이 공연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이러한 핵문제에 대한 핵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강경 분위기, 북한의 내부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관리하는데 행사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까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핵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융통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공연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 북한 내 생중계라는 미국의 요구도 받고, MBC도 세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조를 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백악관이 공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논평을 내릴 정도로 언론의 반응도 좋았고, 북한 국민에게 공연을 알렸다는 것 등의 의미. 북미관계 개선의 큰 발걸음이 되지 않았겠냐고 생각한다.

핵문제 협상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광익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언론의 표현으로 손익계산을 보면, 북한이 얻은 게 많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단순히 공연을 한 게 아니라, 북한은 이것을 내부의 변화를 위한 정비 작업으로 쓸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반미구호를 철거를 하고, 미국 국기를 보여주고 간부가 국기 앞에서 박수치고, 전국 사람들이 한 시간 반 동안 생중계를 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비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 제스처를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자기들의 목적도 따로 있지 않았을 까라고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자기들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준비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을 협상카드로의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추구한 것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북한 가서 느끼는 것은 서로 조율을 하면 미제의 승냥이 등 표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그때의 과정에서 보면 그 단어 빼는 것 때문에 회의가 깨진 적도 많다. 이번 것을 보면 상당한 내부 토론이 있었을 것 같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이런 일을 하려면 김 위원장이 직접 연출하지 않으면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텐데,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면 부담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것이 입장.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 체제의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장광익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 시작에 앞서 평양 뉴욕필 공연의 의미를 살펴보자. 남북 관계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일단 분위기는 미국 쪽이 좋다. 이명박 정부의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성명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새정부 출범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전례에 없던 일이다.

장광익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 뉴욕필 공연이 구체적으로 북미관계에 변화가 있을까? 단지 관현악단의 차원인가?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하여간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핵문제 해결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라이스가 변환외교(transformation Diplomacy)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 변환 외교에 한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이벤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벤트로 보기에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MBC, YTN 등 한국에서 돈을 많이 지원했다.

장광익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 성조기를 허용한 것도 의미있지 않은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그쪽에서 오케이를 낸 것으로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 극장도 중계방송을 위해서 개정을 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 북한 사람이 많이 보는 건가? 2천만이 봤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하루에 4~5시간 방송하는데 뭐 다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남북관계가 새정부 시작하면서 어렵게 시작하고 있는데, 뉴욕 필하모니 공연이 있어서 주변 상황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새정부의 비핵·개방·3000 계획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 전문가를 모시고 한 토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